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확정 과제는

# 천문학 비용…시 지원금 1조 최대 관건

총사업비 5조7000억원 추산 ‘기부대양여’ 한계  
주민 수용성·민간공항 우선 이전 등 숙제 산적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대통령실 주도 6자 TF 첫 공식 회동에서 전격 타결됐다.

정부 주도 속에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군 공항 이전 논란에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용도, 주민 수용성, 민간공항 선 이전을 둘러싼 논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

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공항이 개항한 지 61년, 국방부 평가 결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지 9년 만이다.

문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새 군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5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금용비용 382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7조 원을 넘어 10조 원까지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한 상태다.

종전부지 개발도 핵심과제다.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광주형 실리콘밸리, 디즈니랜드, 백만평 숲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으나, 부동산 침체와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해 백지화됐거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이 8.2㎢(248만평)으로 상무지구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금융비용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관심이다.

무안군은 합의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여기에 주민 반발이 커지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광주에서도 민간공항 선 이전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주 시민들의 여론도 관심이다.

이밖에도 △총사업비 현실화 △기부대양여 현행화 △기본계획상 공항 배치와 활주로 규모, 구역 조정 △무안 산단 조성 근거 마련 △소속을 대책과 농지·어업 보상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지원 방안은 충분히 논의됐는데, 이번 합의 발표문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며 “부족한 내용은 특별법을 개정 보완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 강기정 시장 “미래 새로 설계하는 일” 김영록 도지사 “기대 뛰어넘는 합의”

■ 이전 합의 정치권 환영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합의문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른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는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합의문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논의한 ‘무안 통합 이전 로드맵’은 단순한 공항 이전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무안에는 공항도시가 들어오고 광주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6자 테스크포스(TF)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로 SNS를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은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검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종전 공항 부지를 광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진숙(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지역 인사들은 합의안의 형평성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 “이번 합의안은 광주시의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된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6자 합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무를 명확히 한 재협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도 “지난 6년간 ‘반대’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못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라며 “공식적인 입장 정리와 군민 공론화 과정 없이 합의문을 설명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이날 정부 주도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며 전환점을 맞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방안과,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 검토 등이 포함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경남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합심’

지방의회 차원 첫 정책 공조  
건설·지원법 공동협력 협약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와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공식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건의문과 결의문 등 정책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전남과 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보도자료와 홍보 과정에서도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전남·경남 양 도 지사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 발의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왼쪽 세번째)와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지방의회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남과 경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 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안 채택 등 의회 차원의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 ‘영산강 인공습지’ 조성 본격화

2028년까지 140억 투입…생태공간 확대·관광 명소화  
물순환체계 구축·하수처리수 활용 10만t 정화용수 확보

광주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용두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 5570㎡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착수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수질 정화기능과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인공습지 조성은 영산강의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변 여가·관광·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km 구간의 수질을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때 강물을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돼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돼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강수량 감소에 대응한 광주시의 전략적 물관리 대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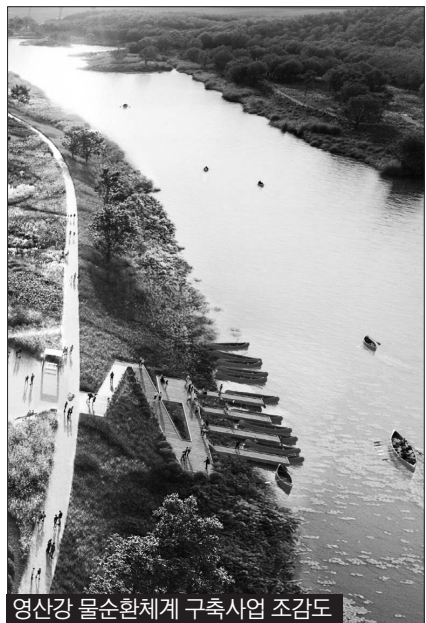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영산강 현지조사와 수질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져왔다.

환경부가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지원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에 참여,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공모사업에 맞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규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영산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조감도

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주요사업과 국정과제의 연계를 통해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고, 인공습지 조성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영산강을 광주의 대표적 명소로 수변공간이자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문금주 “산주 동의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 해소”

산불 확산 예방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



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실적 대안이다.

문 의원은 “부재산주를 찾는다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의를 구하다 산불 위험이 방치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시립수목원, 지역 첫 ‘공립수목원’ 등록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수목원이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

광주시수목원·정원사업소는 시립수목원이 광주시 제1호이자 국내 38번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립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으로 10ha 이상의 부지 확보, 1000종 이상 수목유전자원 보유, 전문인력 배치, 재배·관리·전시시설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자연과 수목유전자원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립수목원은 24만㎡(24ha) 규모

로, 1047종의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자센터 등 관리시설과 전시온실, 한국정원, 잔디광장 등 10개의 주제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자연 관찰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숲해설, 생태환경프로그램, 방학특별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자연생태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공립수목원 등록을 계기로 시민이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녹색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전시·연구·학습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